

## 변화하는 우리나라의 가족제도 바로보기

장옥<sup>1)</sup>

1월부터 호적제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할 가족관계등록부(가족부)가 신설됐다. 호적제는 호주(戶主)를 중심으로 가족 관계를 나타냈다. 반면 가족부는 가족 구성원 개인을 기준으로 가족 관계를 표시한다. 모든 국민이 1인(人) 1적(籍)을 갖게 되는 셈이다.

가족부 도입 배경은 헌법재판소가 2005년 2월 호적제를 규정하는 민법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 평등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위헌 판결을 내린 데서 찾을 수 있다. 기존 호적제가 남성 중심으로 이뤄져 가족 내 남녀 평등을 해친다는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인 것이다.

호적제를 관할하던 대법원은 이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2006년 6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마련했다. 이 법은 양자(養子)를 법률상 차별 없는 자녀로 인정하고 부부 합의에 따라 자녀가 어머니의 성(姓)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 가족 관계를 뛰어 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 '확대 가족'과 '핵가족'

가족은 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를 바탕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 집단의 역할을 한다. 가족 형태는 사회구조에 따라 변해왔다. 예컨대 농경사회에서 가족은 농사일을 거들기 위한 일손의 개념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농경사회에서는 대가족이 보편적이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족 형태는 부모가 결혼한 자녀와 함께 사는 '확대 가족'이다. 자연히 '가부장(家父長)'의 발언권이 강했다. 가풍(家風)은 다음 세대로 자연스레 전수되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여성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뤄진 데다 구성원의 개성과 창의성이 무시되기도 했다.

가족은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사회는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화사회를 경험하면서 가족 모습과 생활의 다양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예컨대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산업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전통 가족 형태가 달라졌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사회구조가 바뀌면서 대도시엔 인구가 몰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족 구성원 수가 줄면서 부모와 미혼 자녀가 함께 사는 '핵가족' 형태가 일반화했다.

가족의 변화는 가족 전체와 가족내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쳐 새로운 가족문화를 낳는 한편 가족 기능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핵가족제에서 부부는 가족의 중심이 된다. 확대 가족에 비해 구성원의 개성과 창의력이 존중됐다. 여성 지위도 높아졌다. 반면 이혼율이 높아져 자녀 양육이나 노인 부양이 사회 문제로 부각됐다.

---

1) 중앙일보 기자

## ◇ 정보화 사회의 가족 형태

1990년대 후반 우리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가족 형태도 바뀌고 있다. 1인 가구나 2인 가족이 늘어나는 등 핵가족이 더 분열돼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한 것이다.

무엇보다 가족 구성원 수가 부쩍 줄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5년 전체 가구 수 1598만8000 가구 중 1인 가구는 317만1000 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20%나 됐다. 구성원이 두 명인 가구도 352만1000 가구로 22.2%에 달했다. 구성원이 두 명 이하의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절반을 약간 밑도는 셈이다.

10년 후 우리 사회는 더 복잡해지고, 핵가족은 독신·무자녀·입양·재혼·혼혈·외국인가족 등으로 세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5년쯤이면 편부·편모 가정이 350만가구에 이르고, 독거노인 가정도 지금의 2배 가까운 128만가구로 급증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렇게 되면 가족은 혈연만 남고 기능은 독립하는 단순집합체에 불과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급속히 '다핵(多核)가족'으로 바뀌고 있다. '싱글 맘' '싱글 대디' 등 한부모(편부모) 가족이나 조부모·손자·손녀로 구성되는 조손(祖孫) 가족도 늘었다. 부모 중 한 명과 자녀로 구성된 가구, 부모 없이 조부모와 손자녀가 사는 가구는 2000년도에 비해 각각 20% 이상 늘었다.

## ◇ 가족 형태 왜 달라지나

이화여대 사회학과 함인희 교수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난 데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혼 증가가 가족 형태를 바꾸는 데 한 몫 한다는 분석도 있다. 가족보다 개인의 삶을 중시하게 되고 자아실현 욕구가 강해지면서 조혼(早婚) 기피 현상이 생긴 것도 한 이유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 없이 자유롭고 풍요한 삶을 누리길 원하는 부부도 등장했다. 덩크족(DINK·Double Income No Kids : 무자녀 맞벌이 부부)이나 톤크족(TONK·Two Only No Kids : 무자녀 노인 부부)이 그 예다.

덩크족을 예로 들어 보자. 덩크족은 미국의 베이붐 세대인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태어난 이들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대변하는 용어로, 결혼은 하지만 아이를 낳지 않고, 상대방의 자유와 자립을 존중하며 일하는 삶에서 보람을 찾으려는 커플들을 가리킨다. 덩크족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덩크족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사회 현상이기도 하다. 1990년대 미국에서 등장한 덩크족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등 아시아에도 상륙해 젊은 전문직 종사자 부부들 사이에 급속히 퍼지고 있다. 특히 국내에는 1997년 IMF 환란 이후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덩크족이 급증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크족의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당크족의 가능성이 높은, 부부만 사는 1세대 가족은 확실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부부만 사는 1세대 가족의 비율이 1990년은 전체 가구수의 8.3%, 1995년에는 10.8%, 2000년에는 12.3%, 2005년에는 20.0%로 꾸준히 늘고 있다.

당크족의 증가는 출산율의 저하로도 증명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 1인당 출산 자녀 수는 1970년 4.53명에서 1990년 1.59명, 2000년 1.47명에 이어 2002년에는 1.17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5~49세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합계 출산율)는 1.08명으로 집계됐다.

국제 결혼 커플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도 혈통주의, 순혈주의를 중시하는 한국의 가족문화를 흔드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통계청은 지난해 8쌍 중 1쌍이 국제결혼 커플이었다고 밝힌다. 2002년에 비해 무려 62%가 증가한 것이다. .

국제결혼의 급증 요인으로서는 두 가지가 꼽힌다. 국제화 시대와 뿌리깊은 남아선호 사상으로 성비 불균형이 심각해지면서 농촌과 저소득층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신부감 수입 현상이다.

가족문제 전문가들은 갈수록 떨어지는 출산율과 이혼율 급증 등 가족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가족형태에 맞는 가족의 개념 정립은 물론 가족관련 법률이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올해부터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하고 가족정책의 근간이 될 건강가정기본법을 주관토록 한 것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 있다.

#### ◇ 가족 기능 어떻게 되살릴까

가족 형태가 다양해져도 가족은 여전히 사회를 이루는 기초 집단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가족은 개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긴장을 풀고 몸과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와 같은 곳이기 때문이다. 가족 성원들끼리는 다른 인간관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심리적 안정과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쌓이는 긴장을 풀어 주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주는 곳으로서의 가족이 가지는 정서적 기능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 수가 줄고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존립에 치명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가정의 형태에 걸맞은 새로운 가족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즉 가족의 형태를 바꾸는 구조적 개선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아내의 사별로 아들과 살고 있는 부자 가정과 남편과 이혼으로 혼자 딸을 키우는 모녀 가정은 각각 부족한 기능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맥락에서 가족 결속력을 다질 수 있도록 정부가 '가족 친화' 정책을 펴야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예컨대 노인문제를 효도라는 측면을 강조해 가정 문제로만

떠맡겨 안 된다는 지적이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아우를 수 있는 가사 지원이나 노인 부양을 위한 정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단위인 가정이 건강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탄탄한 가족 복지 정책과 변화되는 가정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기업문화도 가족들의 건강을 배려한 친가족적 기업문화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테면 탄력적인 근무 시간제를 도입하거나 다양한 복지 지원을 통해 직장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호주제 폐지로 인한 달라진 가족 제도와 우리 사회에서 다양해진 가족 형태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관련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특히

입양 가족 문제의 경우 법적인 지원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내 입양자 수와 해외 입양된 어린이 수가 5~6배가량 차이가 나는 게 우리네 현실이다. 국내 입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맹목적인 혈통주의와 입양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국가차원의 홍보교육도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양육비와 의료비 지원 등 현실적인 제도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국내에서는 어린이가 시설에 있을 경우 양육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정부가 지원하지만 입양되는 순간부터 모든 부담은 고스란히 입양 부모의 몫이다.

#### ◇ '정상 가족'을 보는 시선이 교정돼야

가정 기능의 해체를 막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이 가정생활에 대한 준비와 지식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결혼에 대한 준비와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정 해체는 가정의 문제가 누적돼 발생하므로 절망감이나 불만을 표현하는 대화법 등을 익혀 해체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혼을 결심하는 대다수 커플들은 조정 능력 부족으로 이혼에 치닫는 경우가 많다. 부부 클리닉이나 상담소를 이용하고 부부 관계가 호전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가정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관 확산과 부부의 문제를 객관적 입장에서 조정해 줄 수 있는 부부 클리닉과 프로그램 등이 정부 주도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정상 가족'에 대한 개념도 되새겨 봐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부모와 자녀로 구성되는 가족만을 정상 가족으로 보는 세대가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 형태의 가족만을 정상 가족으로 보는 것은 특정 가족이 통계상 지배적으로 나타나지 않은데다 한 가지 삶의 방식만을 규범화해 개인의 다양한 삶의 기회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상 가족만을 인정하고 그렇지 못한 가족 형태는 이른바 '결손 가족'으로 보는 편파적 시각이 교정될 필요가 있다. 한 부모 가족, 1인 가구도 이제는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가족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를 전통적인 가족 개념으로만 바라본다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사회가 수용하지 못하는 악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가족의 위기를 가속화할 우려를 낳는다.